

vol.39  
April, 2020

# 모니터링 리포트

## 특집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장애인정책 공약과 시사점  
: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

## 포커스

- 2020년 장애인정책모니터링 사업 소개
- 열린관광지 개선사업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약자 참여보장 절실
- 2020년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 분석

## 이슈포착

- 장애인지예산 법안 포함, 장애주류화 총칙은 미반영  
: 김동호 장애주류화정책포럼 대표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과제  
: 고혜선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출처 : 월페어뉴스, "코로나19 진정되면 정신병원-장애인거주시설 실태조사 할 것"

사회와 강제로 격리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속출했다. 보건당국은 코호트 격리(집단 격리) 조치를 취했다. 사회 안전을 해치는 전염병을 가진 사람 취급을 받고 있던 터라 의료진과는 달리 정신장애인들의 일상에는 큰 변화가 아니었다. 애초에 자유와 선택권을 박탈당하고 격리되어 있었으니까. 진단 결과는 병동 입원자 모두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치사율도 높다. 그들을 집단 감염에 취약하고 생명의 안전을 위협받는 환경 속에 가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 Contents

2020 봄 | Spring

- 02 **편집자 편지**  
동학 개미운동과 사회책임투자
- 04 **칼럼**  
바이러스는 죄가 없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김용구
- 06 **특집**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장애인정책 공약과 시사점
- 16 **포커스 1**  
2020년 장애인정책모니터링 사업 소개
- 20 **포커스 2**  
2019 장애인관광환경 모니터링 결과  
열린관광지 개선사업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약자 참여보장 결실
- 26 **포커스 3**  
2020년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 분석
- 38 **이슈포착 1**  
장애주류화 관점에서 본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예산 법안 포함,  
장애주류화 총칙은 미반영
- 42 **이슈포착 2**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과제
- 50 **영화평**  
봉준호 감독과 장애인 퀴터제  
: 봉테일의 세계
- 56 **포럼은 지금**

**발행인** 이권희  
**편집인** 김용구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이앤씨드림타워 1303호 (우) 07255  
**Tel** 02) 833-3097  
**Fax** 02) 833-3093  
**홈페이지** <http://www.ableinfo.co.kr>  
**이메일** [ablecenter@hanmail.net](mailto:ablecenter@hanmail.net)  
**디자인** 물음표와느낌표 02) 822-0772

## 동학 개미운동과 사회책임투자

우리 금융시장은 외국 자본에 완전하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90년대 말 국제통화 기금(IMF)이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구제금융 덕분에 국가 부도는 피했지만, 많은 국내 기업과 금융 산업이 해외 자본의 손아귀에 넘어갔고, 민영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국난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을 했듯 지금은 코로나 국면에서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날뛰는 해외 투기 자본에 맞서 개인 투자자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894년 반외세·반봉건 기치를 내세운 ‘동학농민운동’에 개인 투자자인 ‘개미’를 조합해 ‘동학 개미운동’이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내기업 지분이 외국자본에서 개인들에게 상당히 이전되었고, 국민연금 등 큰 손들이 못한 증시 폭락을 개인들이 방어했습니다. 외국자본이 한 달 넘게 팔아치운 주식을 개인들이 모두 사들인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개인들이 총알로 사용하기 위해 비축해 놓은 돈도 40조원이 넘는다고도 합니다. 분산된 개인들이 일관되게 투자행동을 같이 한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물론 국난극복에 대한 동참이라기보다, 반복되어온 금융위기 전후 증시폭락과 급등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수익창출 전략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벌어놓은 돈으로 좋은 일을 하는 사회공헌도 좋지만, 돈을 버는 과정에서 남을 해치는 것을 피하거나, 공적인 가치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를 사회책임투자라고 말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IMF구제금융을 전후로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20년에 걸쳐 국민연금법 개정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제도화 진전이 있었습니다. 동학 개미운동도 수익창출과 민족자본(진위 논쟁은 뒤로하고) 수성이라는 가치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과, 정당한 편의 제공 등 차별금지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투자자 개인들의 정치적 권리행사로 이어져 장애인 삶과 인권을 보다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공공정책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와 연계한 투자 캠페인을 시작할 적절한 시기라

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제39호 모니터링 리포트에 담긴 내용들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포착1>은 논의 중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총칙에 장애인 일상생활을 다루는 모든 법과 제도에 장애주류적 관점 적용 원칙을 반영하자고 주장합니다. <이슈포착2>는 수요자의 니즈와 선택의 자유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복지예산 전달체계 개편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영화평>에 등장하는 영화의 주제와 소재, 주제를 통찰하는 시점 모두에 장애인이 있습니다. <포커스2>는 관광환경을 장애인의 시선에서 평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기 좋게 디자인 된 장애인 정책도 국가나 기업 조직의 전략 및 정책과 통합되어 있지 않으면,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집>에 소개된 21대 총선에 임하는 각 당의 장애인정책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 노동, 교육, 문화예술 등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분야에서 장애가 고려되지 않으면, 일회성에 그치거나 장애계 요구에 마지못해 대응하는 임시방편 정책으로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투자와 연계하면,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기, 장애인 인권을 증진하는 기업을 찾아 투자하기, 투자한 기업이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할 때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해 잘못된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투자전략 자체가 리스크를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은 저절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증시가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순환을 조성하는 투자전략인 셈입니다.

<포커스1>에서는 2020년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사업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올해는 모니터링 성과 극대화를 위해 홍보와 개선활동에 많은 에너지를 투여할 계획입니다. 애정 어린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0년 03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김홍구

## 바이러스는 죄가 없다

인적이 뜸해진 도심에 출현한 야생동물, 인간의 생산 활동과 이동이 감소하면서 건강해진 지구, ‘코로나19의 역설’이다. 강요된 절제는 지구환경을 회복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속에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인간이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경제활동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극심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인간에게 개발보다 환경이나 인권 등 사회적 가치를 먼저 생각하자는 논리가 통할까.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발전이 국제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기를 바라는 것은 애초에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허한 외침일지도 모른다.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는 감기를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로 우리에게 익숙하다. 사스(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메르스(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종이다. 우리는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고 곧 일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사스와 메르스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도 개발된 적이 없다. 세 바이러스 모두 척추동물을 숙주로 인간에게 전염되는 인수(人獸)공통감염병으로 정확한 유형의 예측과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을 하는 세포가 아니라서 전파가 되려면 반드시 숙주를 필요로 한다. 밀집해서 살고, 왕성하게 교류하며 전 세계를 누비는 인간은 바이러스 숙주로 최적화된 존재일지도 모른다. 익숙하지 않는 인간의 몸에 적응하기 위해 바이러스는 계속 변화하고 다양한 변종으로 진화할 것이다. 대응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오래 머물고 익숙해진 숙주를 버리고 인간 몸으로 터전을 옮기게 된 이유는 뭘까.

인간이 야생동물을 가축화하고 개발과정에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침범하면서 접촉이 많아지고 동시에 개체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파괴된 환경 속에서 숙주는 줄어들고,

오갈 데 없는 바이러스는 인간을 숙주삼아 생존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바랐던 바는 아니다. 단지, 지속적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의 삶의 터전을 확장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경제시스템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이 경제시스템이 고도로 발달된 국가들의 구성원들이다. 이윤추구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절한 임금과 고용 안정성을 내팽개쳤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와 가치사슬로 깊숙하게 엮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경제성장과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경제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강요되면서 코로나19 재앙에서 자유로운 국가를 찾아보기 힘들다.

어렵게 일상을 회복하더라도 소비를 장려하고 개발을 절제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금융위기, 실업대란, 환경파괴, 자연재해 등과 마찬가지로 미지의 병원체에 의한 재앙도 반복될 것이다. 장애인의 적절한 삶의 질과 인권 보장이 제약받는 이유도 개발과 효율성으로 세팅된 경제 시스템에 있다.

지구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여력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개발을 하고, 인권 등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자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는 지금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거부 아니라 보완에 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은 바이러스에 있지 않다. 그 목표와 가치를 무시하고 실천하지 않은 대가다. 우리가 돌아갈 일상은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

※ 이 글은 YTN <서터뷰> “선을 넘은 녀석들 : 인수공통감염병의 비밀”을 참고하였습니다.

2020년 04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김용구**



# 21대 총선, 정당별 장애인 정책 공약 비교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장애인정책 공약과 시사점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

### 1. 선거공약이라는 공적 약속

선거는 유권자로부터 대의(代議)를 위임받는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치행위이다. 이러한 정치행위는 국민들의 '투표'라는 구체적인 다수결 결정방식으로 비로소 실현되고, 이 다수결의 결정방식을 통해 얻게 되는 결과는 '정치적 권력'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등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세 번의 선거가 있다. 이제 선거는 2년마다 번갈아 치러져 국민들의 매우 중요한 참정권 행사방식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듯하다. 이렇듯 2년마다 치러지는 선거는 우리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통해서 국가의 권력을 분점토록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선거공약(選舉公約)의 남발로 공약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는 등 정작 필요한 정책의 제도화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선거공약이란 선거 때에, 정당이나 입후보자가 유권자를 향해 제시하는 공적(公的) 약속이다. 이러한 공적 약속을 통해 유권자들은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의 정책적 지향점을 가늠하고 나아가 자신의 투표행위를 결정하게 된다. 유권자들이 파편적이거나 대중 영합적인 사업 중심으로 공약을 평가하려 한다면, 공약의 본질 혹은 파급효과 등과 같은 그 실질적 기능과 이면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의미를 꿰뚫어 보지 못할 수밖에 없다.

우리 장애계도 각종 선거를 가장 중요한 의사관철 수단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해 왔다. 장애인 당사자 유권자운동을 통해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한 사람의 유권자로서 후보자들이 발표하는 장애인정책공약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투표할 수 있는 풍토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투표 참여율은 전체 선거권자 투표율(2014년 6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비교해 볼 때, 전체 투표율 56.8%, 장애인유권자 투표율 74.8%로 18%가 높음)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렇듯 장애계의 선거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는 각 정치세력들로 하여금 장애인정책 공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책, 실천 가





능한 정책을 고민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를 운영하는 현재적 권력들 간의 직접적인 의석수 대결을 통해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선거만큼 장애인정책의 현안을 공론화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기회이다. 장애인정책공약을 낸 정당이 다수당이 되었을 경우 그 공약의 집행권 및 예산권을 사전에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구해놓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장애인정책들은 적지 않은 예산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등 행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국회와 국민들의 공감을 구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장애계는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들과 출마한 후보자의 공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여론 형성을 위한 지지 또는 비판을 통해 정책적 대안 의견을 내는 등의 유권자 운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2. 공약의 재활용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장애인정책공약은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후 지역사회 케어 복지모델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국내 장애인정책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과 권리 중심의 장애인 권리협약(CRPD) 국가심의회가 예정되어 있는 등 국제적 환경 변화와 맞물려 치러지는 선거만큼, 향후 4년 동안의 우리나라 장애인정책 향방의 가늠자이기도 하다. 선거를 보름 남짓 앞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공약알리미 홈페이지에 등록된 정당이 무려 47개나 된다.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한 군소정당의 난립 때문일 테지만 어쩌면 그동안 기성정당들이 다양한 사회적 소수집단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 것도 한 이유가 되겠다. 준(準)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수인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등 총 300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는 방식이다. 말하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정당의 독식을 방지하고 소수정당이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 받는 방식을 통해 사표를 방지하고 당선자수 비례를 합리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은 듯하다. 거대정당들의 아류인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취지는 이미 무색해졌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히려 장애인 당사자의 현실 정치 참여의 영역이 넓히는 효과를 내 현재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 가능한 장애인 당사자 후보가 무려 4명이나 된다.

이번 총선은 비례대표제 방식을 결정짓는데 각 정당이 시간과 공을 들인 탓에 정의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의 장애인정책공약들은 타 선거에 비해 그 정량적 양이 현저하게 적으며, 내용 또한 기존 정책의 확대하거나 그 대상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매우 단조롭고 협소한 범위의 공약들만 발표된 상황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일 텐데 첫째, 지난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장애인 관련 각종 공약들이 그야말로 봇물을 이루듯 많이 쏟아져 나온 탓에 더 이상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선거공약을 통해 발표되었던 내용들이 여전히 정책화 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현실이 반영된 탓인 듯하다. 아무려나 지난 2016년 총선의 장애인정책공약들을 되짚어 보면 당시 주요 정당이었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3당에서 발표한 장애인정책공약은 모두 83개였고, 분야별로 분류해보면 이동권, 교육권, 건강권, 접근권, 법/제도, 자립생활, 고용, 소득, 주거, 문화체육, 장애여성, 참정권, 예산 등 모두 13개 분야의 관련 공약들이 쏟아져 나왔다.

표1 2016 총선 공약 분야별 통계<sup>1)</sup>

	이동권	교육권	건강권	접근권	법/제도	자립생활	고용	소득보장	주거	문화/체육	여성	참정권	예산	계
새누리당	5	2	4	1	0	0	0	0	0	2	0	0	1	15
더불어민주당	1	0	4	0	0	7	6	2	0	0	0	0	0	20
정의당	4	3	6	3	5	9	6	0	3	0	5	2	2	48
합계	10	5	14	4	5	16	12	2	3	2	5	2	3	83

표2 2016 총선 당시 정당별 관심분야<sup>2)</sup>

정당	내용
새누리당	1순위: 이동권(5개) 2순위: 건강권(4개) 그 외: 교육, 문화/체육(각 2개)

(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한 2016년 주요정당 장애인공약 매니페스토 조사 개요서  
(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한 2016년 주요정당 장애인공약 매니페스토 조사 개요서

더불어 민주당	1순위: 자립생활(7개) 2순위: 고용(6개) 3순위: 건강권(4개) 그 외: 소득보장(2개), 이동권(1개)
정의당	1순위: 자립생활(9개) 2순위: 고용(6개) 3순위: 건강(6개) 4순위: 법/제도(5개) 5순위: 여성(5개) 그 외: 이동권(4개), 접근권, 주거, 교육(각 3개), 예산(2개)

반면,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발표된 주요 정당별 장애인정책공약들은 그 정량적인 양이 적을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도 매우 한정적이다.

표3 제21대 총선 정당별 장애인 관련 공약<sup>3)</sup>

당명	내용
더불어 민주당	<p>▶9순위: 수요 맞춤형 사회안전망 및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자립생활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전체로 단계적 확대</li> <li>②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체계 구축</li> <li>③ 장애인 노동권 및 주거권 보장 강화</li> <li>④ 장애인 교육권 및 이동권 보장 강화</li> </ul> </li> </ul>
미래 통합당	<p>▶9순위: 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비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홀로어르신,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상황 전달하는 스마트 밴드 보급</li> </ul>
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장애인에 대한 감염병 및 재난안전 종합대책 마련</li> <li>② 탈시설 정책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 추진</li> <li>③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CRPD 선택의정서 채택</li> <li>④ 활동지원 자부담 폐지, 65세 이상 적용 등 장애인 활동권 보장</li> <li>⑤ 사회적 소통 어려운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인권보장</li> <li>⑥ 최저임금 적용과 장애인공기업 설립으로 장애인 노동권 보장</li> <li>⑦ 장애인연금 인상 등 장애인 소득 보장</li> <li>⑧ 구강진료 센터, 공공재활병원 확충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li> <li>⑨ 무장애도시 실현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li> <li>⑩ 보조공학기기 지원 강화로 장애인 고령자 편리한 환경 조성</li> </ul>

표3 제21대 총선 정당별 장애인 관련 공약<sup>3)</sup>

당명	내용
미래 한국당	<p>▶9순위: 따뜻한 동행, 'Go, Togeth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만 64세까지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연령 제한 단계적 폐지</li> <li>- 300㎡~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li> <li>-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확대 및 전국 표준화, 장애인 대중교통 수단 강화</li> <li>-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신체 부착형 재난알림시스템 연구 개발, 보급(시청각 장애인 73%재난보도 사각지대)</li> <li>-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점자 스마트워치' 보급 확대</li> <li>- 뇌전증 환자에게 직업훈련, 의료비, 심리상담 등 체계적 지원</li> </ul> </li> </ul>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의 장애인정책공약들은 ①활동지원제도의 개선, ②장애인연금 확대, ③이동권 보장, ④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 등 모두 네 가지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들 제도들은 그간 장애계에서 끊임없이 개선을 주장했던 제도인 탓에 이전 각종 선거에서도 단골로 등장했던 공약들이기도 하다.

먼저 활동지원제도 개선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서비스 공백 해소를 공약했고, 정의당은 65세 이후 장기요양보험으로 강제 전환 폐지를 통한 선택제 도입, 그리고 미래한국당은 현재 만 64세까지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연령 제한 단계적 폐지를 공약했다. 활동지원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요양으로 그 서비스가 강제로 대체되는 문제는 그간 장애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왔고,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면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반발을 사기도 했다. 주요 정당 모두 공약한 만큼 이번만큼은 개선될지 기대가 되는 공약이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에서 발췌해서 정리한 내용임 (2020년 3월 25일 현재) <http://policy.nec.go.kr/>

두 번째로 장애인연금 확대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전체로 단계적 확대를 약속했고, 정의당은 ①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②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만큼 단계적 인상, ③소득 기준 폐지 등 매우 구체적으로 공약했다.

또 이동권은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 교통수단 전국통합지원 체계 구축(장애친화형 광역, 마을, 고속버스 등 개발 및 배치 확대)을 약속했고, 미래한국당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확대 및 전국 표준화, 장애인 대중교통 수단 강화를 공약했다. 그리고 정의당은 ① 시내버스 대폐차 차량의 경우 저상버스 100%로 도입, ② 무장애 시내버스 정류장 확대(점자블럭, 버스 위치 안내, 탑승 위치 전송 등), ③ 고속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마을버스 등 저상버스 50% 도입, ④ 장애인콜택시 전국 단일 기준 마련 및 중앙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⑤ 보행 불가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 이용, 보행 가능 교통약자는 복지콜택시 운영, ⑥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 의무대상 민간시설 확대, 심사 시 중증장애인 전문가 포함 등 장애계에서 그동안 요구했던 이동권 관련 정책들을 대부분 수용해 공약화했다.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이 ① 장애인 일자리 매년 1,000개씩 확대, 일자리 종류 다양화 추진, ②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의무고용 대상 업체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감독 강화를 공약했고, 정의당이 ①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조항) 폐지, ② 최저임금법 유일한 적용제외 대상자인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③ 장애인 작업능력 평가 후 정부가 임금 차액 지원 등 사업주 인센티브 부여, ④ 한국형 장애인공기업 설립, ⑤ 소규모 직업재활시설을 지역별로 통합·운영, ⑥ 장애인·노인용품 제조판매, 산림·농원 재배, 수리·정비·주택개조 등 다양한 공익사업 개발. 이에 따른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등을 공약했고, 민중당 또한 ①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삭제와 ②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현행 3.4%(민간 3.1%)에서 5%로 상향 조정 등을 공약했다.

장애계의 정책 어젠다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수렴되거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담김으로써 미흡하나마 최소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장애계의 숙원이었던 장애등급제 폐지는 대통령 공약사항에 수렴되어 그

실천 로드맵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담겼으며, 부양의무제 폐지, 거주시설 탈시설에 대한 단계적 개선 방향 또한 장애인정책의 한 축을 이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각 정당에서 발표한 공통된 장애인정책공약의 내용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① 활동지원제도의 개선, ② 장애인연금 확대, ③ 이동권 보장, ④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 등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우리사회의 한 사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들이다. 즉, 한 사람의 장애인 당사자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연금을 통한 최소한의 생계비가 보장되어야 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출퇴근이 가능한 이동방식,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이 최소한의 영역들은 이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여야 함에도 여전히 각종 선거의 공약내용으로 등장한다.

이 외에도 여성의당은 장애여성의 맞춤형 경제적 지원금 제공과 장애여성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구축을 위한 맞춤형 직업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애인 여성에게 경제독립 지원금을 제공하여 경제권을 확립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또 친박연대는 장애인의 생계비 지원 확대, 한국경제당은 부유세 3%를 도입하여 마련되는 총 66조의 예산을 활용해 장애인 지원체제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대안도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가장 주목했던 공약 중에 하나는 정의당이 공약한 '장애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 대책과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안전 종합대책'이다. 최근 코로나19의 창궐 이후 전염병 대책에서 소외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상황, 특히 장애인주거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라는 극단적이고 비인간적인 조치는 관련 정책의 보완을 통해 반드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3. 결론 - 공약보다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성 기대

일반적으로 볼 때 선거에서 유권자는 크게 3가지 기준에 의해 투표 지지를 결정한다고 한다. 첫 번째는 유권자가 모든 이슈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와 입장을 가질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일체감을 선택의 지름길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것으로 자신이 선호



하는 정책과 입장과 가까운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때 자신과 선택 대안과의 이념적 일체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유권자는 이념을 토대로 정책을 평가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후보자나 정당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후보자 요인으로 정당 일체감 혹은 정책 선호와 관계없이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역량, 업적 등이 투표의 기준이 된다고 보는 시각이다. 그렇다면 장애계의 투표는 어떤 기준을 통해 결정될까? 복지지출이 적은 우리나라 복지정책 환경 상 각 정당의 장애인정책 관련한 공약을 기준으로 투표에 임하게 될 확률이 높다. 이러한 투표 행위의 기준은 정책의 평가를 통해 자신에게 복지적 이득이 되는 후보자나 정당을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선거에서의 공약은, 공약을 제시한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되면, 국민들로부터의 별다른 저항 없이 공약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장애인 유권자들을 의식한 장애인정책공약은 이제 각 정당의 선거용 정책공약의 한 목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공약의 정책화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다. 어쩌면 여전히 장애인정책공약은 정치권의 시혜적 방식의 구색 갖추기로 다뤄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위한 고민의 결과가 아닌, 선거 당시 상황과 사회적 이슈에 영향을 받아 단순히 시혜적인 복지의 문제로만 접근한다면 장애인정책공약은 한낱 정치적 선언에 불과할 것이고, 또다시 다음 선거에서 똑같은 공약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나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의 장애인정책 환경이 이전보다 훨씬 나아지리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막연한 믿음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회진출이 꽤 많이 이뤄질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 때문이며, 이들이 활발한 국회활동을 통해 이뤄낼 정책적 제도들은 지금, 총선을 통해 선언된 각종 장애인정책공약보다 훨씬 장애인 당사자성을 갖춘 구체적인 정책들이며 그 영역 또한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이 책자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지역모니터링센터

- 서울(대표 이권희) T 02-833-3097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이앤씨드림타워 1303호
- 부산(대표 김호상) T 051-582-323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675 우신빌딩 2층
- 대전(대표 안승서) T 042-286-0036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176번지 15-4 동진프라자 332호
- 광주(대표 김 랑) T 062-673-0420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 131번길 17
- 울산(대표 성현정) T 052-289-1254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73 세한빌딩 5층
- 경기(대표 안미선) T 031-906-309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4, 남정시티프라자 806호
- 경남(대표 문숙현) T 055-283-131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로 42 토월복합상가 303호
- 전북(대표 김미아) T 063-228-1989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만내 4길 6-23
- 충남(대표 박종균) T 041-631-0691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47번길 새아스프라자 501호
- 제주(대표 김성완) T 064-751-8096 제주도 제주시 천수동로 30, 201호

## 2020년 장애인정책모니터링 사업 소개

손영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모니터링 필요성과 달라진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2020년 사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국회 장애인 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과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내이행 모니터링 사업을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을 예산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시켜 장애인 복지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보다 확대하고 체계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개선 활동을 강화해 모니터링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가능한 경우 모니터링을 8월까지 마무리하고 결과 분석, 평가, 활용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회 의정활동 모니터링

의정활동 모니터링 대상을 지방의회에서 국회로 옮겨서 진행합니다.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결정하고, 복지 전달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 이슈와 밀착해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들이 해당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센터는 모니터링 기법 및 평가방법 교육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은 계속할 예정입니다.

국회로 눈길을 돌린 모니터링은 다음 사항에 방점을 두고 진행합니다. 우선 국회 의원 발언이 장애인 인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합니다. 둘째, 발언 내용을 분야별로 분류해 국회의 장애인 정책 논의 실태를 파악·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관련 법률 제·개정 과정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장애인계의 지혜를 모아 시의성 있는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21대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임기가 올해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법안에 대한 모니터링은 선출된 의원 중심으로 6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며, 발언 발췌는 20대 국회 4년차 회기를 대상으로 8월까지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모니터링

해당 사업은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이행 상황 모니터링은 물론, 국가 수준의 장애인 정책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적인 사업이기도 하고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의 성과가 축적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규범의 구성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된 데이터는 국가보고서, NGO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모두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입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를 체계화 해 정리하는 템플릿도 이용자의 편의와 이해를 용이하게 구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단체는 물론 소관 정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자로 구성된 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약 당사국의 일반의무 이행, 당사자 권리 보장, 이행 모니터링 실태를 정책, 이행시스템, 성과관리 측면에서 보다 폭넓게 접근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전문가 및 당사자 자문 그룹을 구성·운용할 예정입니다.

결과물을 공개하는 11월 통합결과보고대회에 맞춰 9월부터 분석·평가가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8월까지 관련 모든 정보를 수집하게 될 것입니다. 예산모니터링, 자치법규 모니터링, 의정모니터링, 관광환경 모니터링 결과물도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이행 실태를 파악하는 정보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 장애인 정책 예산 모니터링

중앙정부가 아닌 국가수준의 장애인 예산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기초단체와 공공기관까지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시켜 진행합니다. 세부사업 명세까지 파악할 수 있어, 앞서 소개한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모니터링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센터 사업 중 최우선 순위에 배치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대로 국가의 장애인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책변화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으려면 시계열 분석이 요구되고, 최소한 3개년 통계가 필요합니다. 센터 연구원과 당사자 모니터 단원이 현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6월 말에 예산 발췌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 자치법규 모니터링

장애관련 자치법규 수집과 동시에 내년 장애차별 조항의 개선 활동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정리하고 체계화 하는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2010년부터 장애차별조항 개선을 위한 전국 연대체를 구성해 활동해 온 성과가 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진전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내년에는 전국 11곳 지역 포럼 모니터링센터와 협력해 대대적인 개선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은 5월부터 8월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제·개정된 모든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장애인 관광환경 모니터링

2020년 장애인 관광환경 모니터링은 시·청각 장애인 등 정보약자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합니다. 지난 2년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물리적 접근 환경은 부족하나마 조력자의 도움이 있으면 전동 휠체어 사용자가 관광지를 둘러보거나 주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정보접근성은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성 개선공사를 시행한 열린관광지조차도 편의제공이 없는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항목이 열린관광지 접근성 개선공사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열린관광지 정책 실행과정에 정보약자의 참여가 배제, 개선공사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부족, 분절된 관광정보안내 시스템 문제가 드러난 셈입니다.

4월에는 2019년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요청을 하고, 정보약자를 중심으로 2020년 모니터 단원을 구성해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5월부터 두 달간 전국 열린관광지 8곳을 대상으로 수행한 모니터링 결과는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정보에 활용하고, 동시에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2020년 센터 활동에 대한 이해관계자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 및 정보제공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진행합니다. 독자 분들의 지혜와 애정 어린 비평을 기대합니다.

## 2020년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사업

### 1. 지역사회 정책모니터링사업

- 국회 / 예산 / 자치법규 -

### 2. CRPD 모니터링사업

-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모니터링 -

### 3. 장애인 관광환경모니터링사업

### 4.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사업

### 5. 통합결과보고대회



## 2019 장애인관광환경 모니터링 결과

# 열린관광지 개선사업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약자 참여보장 절실

윤선애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세계관광기구(UNWTO)는 관광인구가 2020년에 14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2018년에 이미 넘어섰다. 관광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국가마다 다양한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통점이 있다면, 관광약자의 권리 보장과 유니버설디자인 관광환경 조성이라는 정책적 지향이다. 관광지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과 무관하게 누구나 낮은 공간이며 관광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15조의 2(관광활동의 차별금지)는 관광지의 '정보 접근성과 인적 서비스 제공'을 장애인 관광활동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해 4월 정부는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구성, 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0조 2(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는 “연령,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며 공공디자인에 ‘장애요소’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디자인 관행에 가장 취약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이해관계자 및 이들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정부부처는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 거버넌스와 참여 채널에서 배제되어 있다.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sup>(1)</sup>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동시행령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육부 2. 외교부 3. 행정안전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여성가족부 6. 해양수산부

## 모니터링 개요

우리 센터는 2018년부터 장애인 관광환경 모니터링을 시행해오고 있다. 2019년 모니터링 대상지는 2016년 지정된 열린관광지 5곳 중 4곳<sup>(2)</sup>을 표본으로, 일반관광지 중 표본과 유사한 관광자원 또는 체험을 서비스하는 4곳<sup>(3)</sup>을 포함하여 총 8곳으로 선정했다. 조사단원은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 모니터링 단원과 비장애인 단원의 2인 1조를 한 팀으로 했다. 조사대상 8개 관광지는 팀별로 세 차례씩 교차 조사했다. 평가기준은 **표1** 과 같다. 1차, 2차, 3차 모니터링의 같은 평가항목 점수 총합을 평균 점수로 환산하였으며, 평균점수 구간에 따른 사용성 수준 해석을 부여하였다.

**표1** 체크리스트 작성기준과 평균점수의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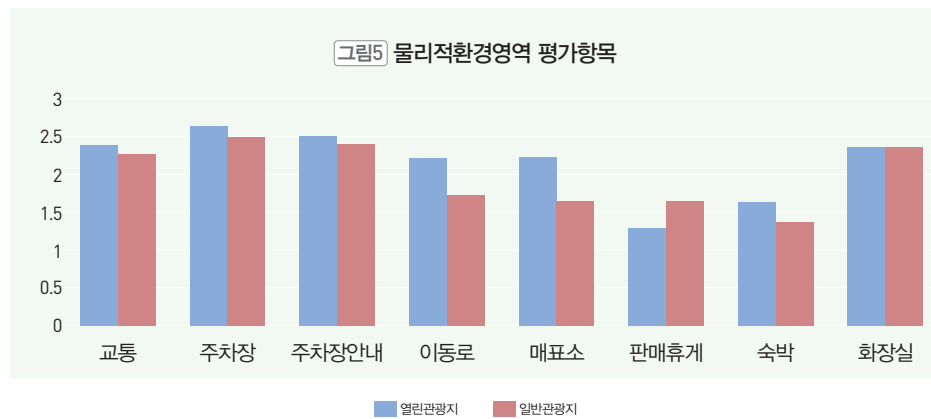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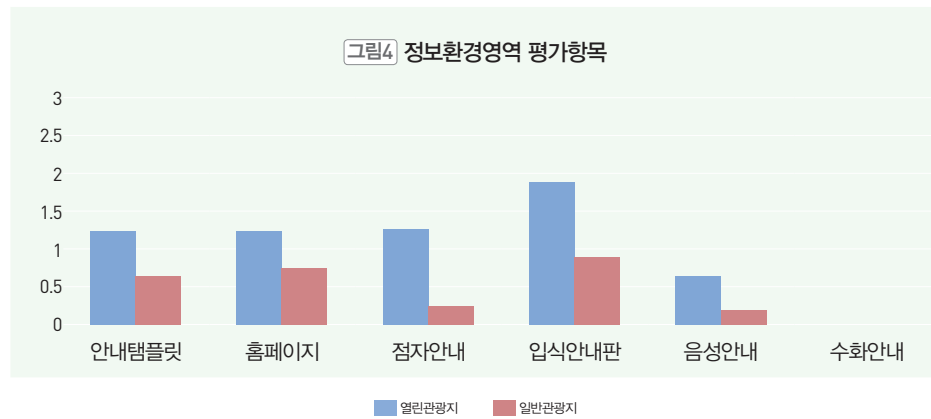
평가	조사표 점수	평균점수 구간	체크리스트 평가기준과 점수의 해석
적정	3	3.0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혼자서 접근 그리고 이용 가능한 정도
보통	2	2.0 ~ 2.9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도움을 받아야 접근과 이용 가능한 정도
미흡	1	1.0 ~ 1.9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도움을 받아도 접근과 이용 불가능한 정도
없음	0	0.0 ~ 0.9	관련 편의시설이나 서비스가 없는 경우

## 전체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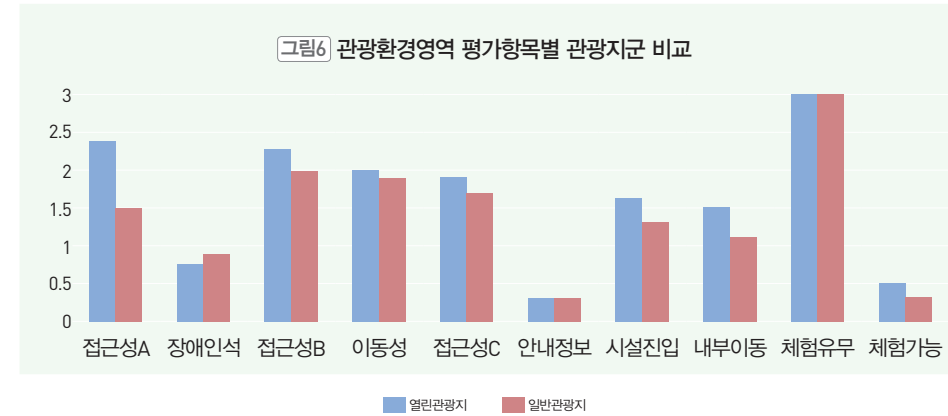
3개 영역별 그리고 24개의 평가항목별 결과는 **그림1**부터 **그림6**에서 보는 것과 같다. 요약하면, 3개의 영역별 비교에서 열린관광지는 일반관광지보다 장애인 접근성이 높게 나타났다. 24개의 평가항목별 비교에서도 2개 항목<sup>(4)</sup>만 일반관광지군 평균

(2) 강릉시 정동진모래시계공원,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 보령시대천해수욕장, 여수시 오동도.  
 (3) 부산시 태종대, 강릉시 경포해수욕장,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부산시 다대포해수욕장.  
 (4) 물리적환경영역의 '판매휴게'와 관광환경 영역의 '장애인식'

점수가 열린관광지군 보다 높았고, 나머지 22개 평가항목은 열린관광지군의 평균점수가 일반관광지군보다 높게 나타났다.<sup>(5)</sup>



(5) 자세한 분석 결과는 우리 센터 홈페이지(www.ableinfo.co.kr) '2019 장애인 관광환경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참고



\* 접근성 A,B,C는 야외관람형, 산책로형, 일반시설형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항목으로 구성

모든 영역에서 열린관광지군은 일반관광지군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받았다. 열린관광지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는 점은 2018년 모니터링 평가결과와 같았다. 하지만 일반관광지군과의 상대 평가에서 열린관광지군의 점수가 다소 높게 나왔을 뿐,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조력자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관광지를 둘러보거나 관광자원을 모두 향유할 수 없다는 점은 다르지 않았다. 모니터링 대상 열린관광지와 일반관광지 모두 '전동 휠체어 사용자가 혼자서 또는 도움을 받으면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척도'인 2점미만 평균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표2 참조)

**표2 열린관광지 - 일반관광지 평균**

구분	열린관광지	일반관광지
정보환경	1.08	0.59
물리적환경	2.22	2.07
관광환경	1.55	1.41
평균	1.62	1.36

표3 관광지별 영역별 평균점수

구분	열린관광지				일반관광지			
	여수	보령	고창	강릉	부산	경포	문경	다대포
정보환경	1.03	0.96	1.33	0.99	1.00	0.34	0.31	0.38
물리적환경	2.14	2.22	2.28	2.25	2.00	2.06	2.11	2.12
관광환경	1.83	1.65	1.38	1.35	0.89	1.80	1.37	1.56
평균	1.25	1.21	1.25	1.15	0.97	1.05	0.95	1.02

우선 정보환경영역에서는 타 영역에 비해 점수 차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만, 열린관광지가 일반관광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평가 점수를 받았다. 사용성 평가 기준인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해당 영역에서는 비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청각 장애인에게는 관련 편의시설이나 서비스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수준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정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광지 연계 장애인용 대중교통 안내, 장애인이 사용가능한 식당 및 숙박 정보 안내, 수화 서비스 안내 항목에서 특히 점수가 저조했다.

물리적환경영역에서는 모니터링 대상 모든 관광지가 조력자의 도움이 있는 경우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관광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열린관광지가 일반관광지와 비교해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관광지 내 편의시설(편의점, 매점, 기념품점, 카페, 식당 등) 및 주변 숙박시설 접근성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은 열린관광지 정책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관광환경영역은 개별 관광지를 야외관람형, 산책로형, 일반시설형으로 나누어 접근성을 평가한 것으로, 관광지 특성에 따라 취약한 분야가 도출될 수밖에 없는 평가 방식이다. 그래서 열린관광지와 일반관광지 평균점수 편차가 타 영역에 비해 적다. 관광지 주 출입구에 장애인용 정보 안내, 관광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및 보조인력 제공 항목에서 대부분 관광지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점

우선 열린관광지 개선사업 모니터링 강화 및 개선사업 과정의 시·청각 장애인 등 정보약자 참여 보장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환경영역의 평가항목 평균점수는 대부분 2.0점 이상으로 조력자의 도움이 있는 경우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접근 및 사용가능한 수준이다.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을 기준으로 하면 사용성 수준을 보다 후하게 평가할 수도 있겠다. 열린관광지 개선공사의 관련 항목에는 교통, 주차장, 주차장안내, 매표소, 판매휴게시설, 숙박, 화장실, 이동로가 포함되어 있다. 반면 관광환경영역(야외관람형, 산책로형, 일반시설형)의 물리적 접근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장애인용 정보 제공, 체험 프로그램 제공 및 보조인력 지원 항목은 여전히 취약하다. 더구나 정보환경영역은 지정 3년이 지난 열린관광지도 1.08점을 받았다. '관련 편의시설과 서비스가 없는' 수준에 가깝다. 개선공사 항목에 홈페이지, 안내 팸플릿, 입식안내판, 점자안내, 음성안내, 수화안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았거나 개선공사 과정에서 정보약자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둘째,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용 정보안내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홈페이지', '안내 팸플릿', '입식안내판', 단위 관광시설의 '주출입구 정보안내' 등이 서로 다른 관광정보안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동, 관람, 체험과 이용, 식사, 휴식, 숙박 등 관광활동 전 과정이 분절적이지 않듯이 정보 또한 분절적이거나 일관성을 상실하면 관광객은 불편하다. 더 나아가 관광약자는 관광이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관광약자 권리 증진이 곧 관광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소관 부서의 경계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의 시행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 편의제공 의무의 내용 구체화에 대한 검토, 관광사업자 또는 위탁주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2020년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 분석

한동국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지난 2019년 12월 10일 국회 파행을 거듭하며 2020년 정부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이날 통과된 예산은 지난해 예산 469조 6,000억원 보다 9.1% 증액된 512조 3,000억 원이다. 그동안 해마다 장애인 예산이 증액되고 있었지만, 장애인당사자들은 체감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해 예산 증액을 외치면서 매년 거리로 나와 투쟁해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해 7월 1일에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되면서 장애인 예산 증액에 대해 한층 더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어 왔던 서비스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 예산이 증액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월에 '2020년 장애인 복지 정책' 발표를 통해서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가 장애인 정책의 큰 전환점이었다면,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장애계와 정부가 장애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를 발판으로 장애인 복지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통합사회 실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 제도 의지는 결국 예산에서 보여줘야 한다. 이에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센터')는 2020년 중앙정부 소관부처별로 예산서를 전수 모니터링하여 장애인 예산을 발췌하였고, 지난해와 비교하여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예산추이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 모니터링 개요

1. 모니터링 기간: 2020년 2월 ~ 3월 (2개월)
2. 모니터링 대상: 중앙정부 18부,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
3. 모니터링 자료: 중앙정부 각 소관부처별 2020년 예산서 사업설명자료, 각 목 명세서
4. 모니터링 자료 습득방법 : 중앙정부 각 소관부처별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 모니터링 방법

2020년 중앙정부 예산자료는 18부,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 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된 '사업설명 자료집과 각 목 명세서'를 다운로드 받아수집하였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보완하였다. 장애인 관련 예산은 2008년부터 장애인 정책예산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면서 축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센터가 도출한 핵심키워드를 활용해 발췌하였다. 핵심 키워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장애인 예산 발췌를 위한 핵심 검색 키워드**

장애, 편의, 정신요양, 사회복지시설, 정신질환, 한센(병), 재활, 특수교육, 정신보건, 휠체어, 수화, 특수보육, 센터도우미, 웹 접근성, 저상버스, 특별운송, 특별교통, 언어발달, 발달, 미숙아, 대사이상, 난치, 난청

센터는 발췌한 장애인 예산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세부사업명과 세부내역을 정리한 후, 소관부처별, 성격별로 분류해 분석하였다.

2020년 중앙정부의 장애인 예산

**표-2 2020년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 규모** (단위: 억 원, %)

구분	중앙정부 예산규모 (2019-2020)		장애인 예산규모 (2019-2020)		장애인 예산 비율 (2019-2020)	
	'19년	'20년	'19년	'20년	'19년	'20년
중앙정부 예산	469조 6,000억	469조 6,000억 (△9.1%)	4조 2,702억	5조 8,030억 (△18.8%)	0.91%	0.99% (△0.8%)
중앙 정부 소관부처별 사회복지 예산	161조	181조 (△12.4%)	8,030억	18,800억 (△18.8%)	2.6%	2.8% (△0.8%)
보건 복지부 예산	45조 4,000억	51조 2,000억 (△12.7%)	3조 732억	3조 732억	7.1%	7.4% (△0.3%)

(\*출처: 기획재정부 2020년 중앙정부 예산정보)

표-2를 보면 2020년 중앙정부 예산은 총 512조원이다. 이 중 센터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췌한 장애인 예산 규모는 약 5조 732억 원이다. 작년 대비 8,030억 원 증가한 것이고, 중앙정부 예산 대비 장애인 예산 비율로 보면 작년 대비 0.8% 증가한 약 0.99% 수준이다. 중앙정부 소관부처별 사회복지 예산인 181조원 대비 장애인 예산 비율도 2.8%. 보건복지부의 2020년 예산은 51조원 중 장애인 예산은 3조 7,998억 원이다. 복지부 전체 예산의 약 7.4%에 해당한다. 작년과 비교하면 0.3% 증가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야한다. 그러나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됨에 따라 적어도 1%이상대의 비율로 증가할 거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2020년 장애인 예산 5조 732억 원에 대한 중앙정부 소관부처별로 편성된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1**과 같다. 보건복지부에 3조 7,998억 원(74.91%) 규모로 가장 많은 장애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고용노동부 5,986억 원(11.80%), 국토교통부 4,279억 원(8.44%), 문화체육관광부 1,284억 원(2.53%), 교육부 509억 원(1.01%) 순이다. 작년에 비해 부처별 장애인 예산 편성 순위가 조금 달라졌지만, 2019년 예산편성비율<sup>(1)</sup>과 비슷하다. 보건복지부 외 4곳에 편성된 장애인 예산 비율이 98.70%에 이

2020년 중앙정부 소관부처별 장애인예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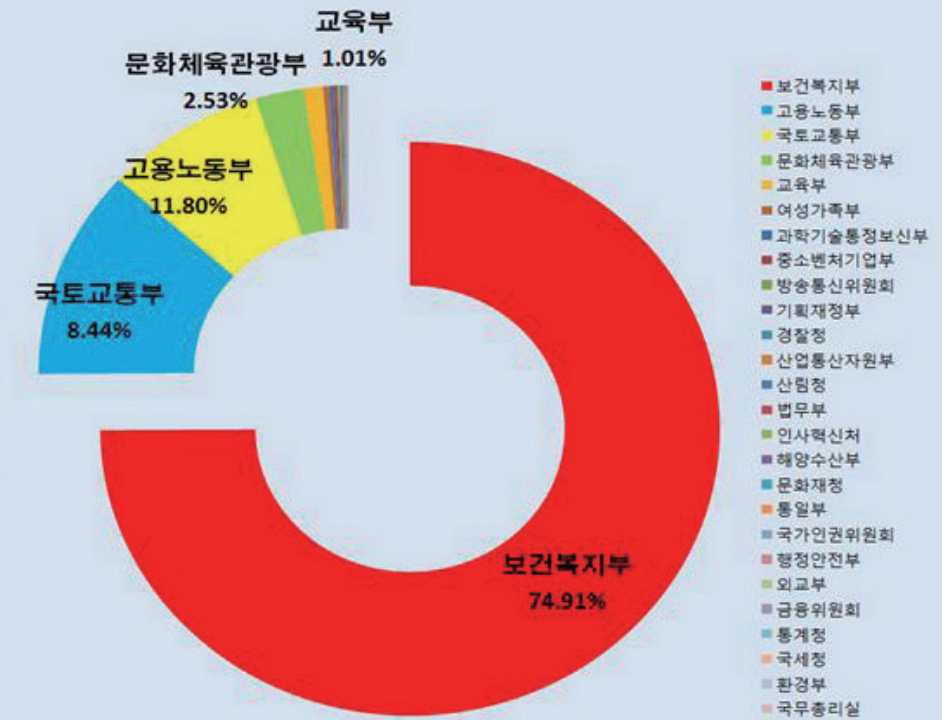


그림-1

다. 그 외 여성가족부 등 22곳의 소관부처는 1% 미만이었으며, 장애인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소관부처는 감사원 외에 23곳이다. 장애인지적 관점이 그만큼 빈약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1) 2019년 예산편성비율 보건복지부 76.0%, 국토교통부 9.5%, 고용노동부 9.1%, 문화체육관광부 2.2%, 교육부 1.83% 순이었음. (2019년 지역사회모니터링 사업 보고서 중)

표-3 2019년, 2020년 중앙정부 소관부처별 장애인예산 증감률 분석

(단위: 천 원)

소관부처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	예산비교	증감률	비고	
보건복지	3,247,597,627	3,799,868,033	△ 552,270,406	△ 17.0%	작년대비 증가한 예산	
고용노동부	389,635,095	598,670,104	△ 209,035,009	△ 53.6%		
국토교통부	405,584,000	427,975,000	△ 22,391,000	△ 5.5%		
문화체육관광부	94,173,118	128,499,121	△ 34,326,003	△ 36.4%		
여성가족부	10,817,000	15,130,000	△ 4,313,000	△ 3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381,960	11,582,000	△ 2,200,040	△ 23.4%		
중소벤처기업부	7,975,000	10,806,000	△ 2,831,000	△ 35.5%		
경찰청	2,672,000	3,272,200	△ 600,200	△ 22.5%		
산림청	1,223,000	2,450,400	△ 1,227,400	△ 100.4%		
해양수산부	31,800	1,153,800	△ 1,122,000	△ 3528.3%		
문화재청	638,040	854,000	△ 215,960	△ 33.8%		
소방청	521,748	602,000	△ 80,252	△ 15.4%		
외교부	31,000	32,000	△ 1,000	△ 3.2%		
국가인권위원회	648,000	648,000	0	0.0%		작년대비 동결 예산
통계청	11,548	11,548	0	0.0%		
원자력안전위원회	1,000	1,000	0	0.0%		
기획재정부	5,287,000	4,970,000	▼ 317,000	▼ 6.0	작년대비 삭감된 예산	
교육부	78,262,622	50,983,596	▼ 27,279,026	▼ 34.9		
인사혁신처	1,366,909	1,358,403	▼ 8,506	▼ 0.6		
방송통신위원회	8,800,000	8,309,340	▼ 490,660	▼ 5.6		
산업통신자원부	4,400,000	3,100,000	▼ 1,300,000	▼ 29.5		
통일부	855,000	757,000	▼ 98,000	▼ 11.5		
국세청	9,500	8,550	▼ 950	▼ 10.0		
환경부	308,000	5,000	▼ 303,000	▼ 98.4		
기상청	8,000	0	▼ 8,000	▼ 100.0		
농수산식품부	4,800	0	▼ 4,800	▼ 100.0		
법무부	0	2,110,055	△ 2,110,055	△ 100.0	작년대비 새롭게 책정된 소관부처 예산	
행정안전부	0	60,566	△ 60,566	△ 100.0		
금융위원회	0	30,000	△ 30,000	△ 100.0		
국무총리실	0	2,400	△ 2,400	△ 100.0		
조달청	0	2,000	△ 2,000	△ 100.0		
합 계	4,270,243,767	5,073,252,116	△ 803,008,349	△ 18.8%		

감사원	최근 2년간 장애인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소관부처
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가보안실	
국가보훈처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농업진흥청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방위사업청	
법제처	
병무청	
새만금개발청	
식약처	
특허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표-3은 중앙정부 소관부처별 장애인예산 규모를 작년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앞서 말했듯이 올해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은 5조 732억 원이며 작년 예산 4조 2,702억 원 대비 약 18.8%가 증가했다. 고정적인 예산의 증가율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애인 예산이 작년 대비 17.0%가 증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53.6%, 여성가족부 39.9%, 문화체육관광부 36.4%, 국토교통부 5.5%, 교육부 4.5%이며, 외교부가 가장 낮은 3.2%의 증가율을 보였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소관부처는 해양수산부이다. 작년대비 약 3528.3%가 증가한 장애인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 같은 증가 추이의 원인은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전국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11억 2,000만원을 편성한 것이 원인으로 보고 있다. 산림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 예산내역에서 장애인 이용편의 증진 예산을 12억 2,500만원을 편성됨에 따라 작년 대비 100.4%로 장애인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작년 대비 장애인 예산을 삭감하거나 삭제한 소관부처들도 있다. 대표적인 소관부처는 환경부는 2019년 장애인 예산을 약 3억 8백만원 규모로 반영하였으나 2020년에는 3억 3백만원이 감소한 5백만원을 편성하였다. 소아발달장애 전문기관(단국대병원) 지원 예산이 올해는 편성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다. 교육부는 2019년 장애인 예산을 약 782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나 2020년에는 272억 원이 감소한 509억 원을 편성하였다. 국립대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예산과 특수학교 운영 지원 예산이 삭감된 것이 원인으로 본다. 산업통상자원부도 2019년 장애인 예산을 약 44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나 2020년에는 13억 원이 감소한 31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는 차세대 재활복지 의료기기산업 육성 예산을 삭감한 원인으로 본다. 농수산식품부와 기상청은 작년에 각각 웹접근성 인증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올해는 삭감하게 되면서 장애인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2019년 장애인 예산을 반영 하지 않았던 법무부 외 4곳 소관부처들이 올해 장애인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억 원 규모의 예산이다. 새롭게 반영한 장애인 신규 예산들도 있었고, 원래 장애인 예산으로 반영 했지만, 소관부처들의 예산서가 다소 통합적으로 기입되어 작년 예산모니터링에서 검색이 되지 않아 발체가 어려웠던 예산들이다.

2020년 법무부가 약 21억 원 규모의 장애인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다. 주요 예산 내역은 교정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예산과 교정시설 수용자, 소년원생 대상으로 정신질환 치료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의 6천만 원 규모 예산 편성은 전국 장애인 행복 나눔 페스티벌 진행 예산과 청사 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예산으로 이루어졌다. 국무총리실은 장애인 정책관련 전문가 간담회 진행에 2백 4십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조달청은 관내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 수수료 예산에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처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 교육, 주거, 문화, 체육 등 각각 해당 소관부처별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 예산은 장애인의 기본 소득 보장과 일상생활의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직접 지원예산이며, 이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다른 소관부처에 비해 장애인 예산 편성비율이 높은 이유다.

2020년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 성격별 분류

다음 장애인 예산의 질적 분석을 위해 현재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는 예산의 사업명을 기준으로 성격별 분류를 실시하였다. 장애인 예산을 정책의 성격 분야에 따라 소득보장, 의료재활, 자립생활, 장애인시설, 고용·취업, 이동·편의, 문화·체육·정보, 기타 8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아래 표-4는 분류에 따라 주요사업들을 정리한 것이다. 비록 간략한 분류이지만 이러한 성격별 분류를 통해 장애인 예산의 대략적인 추이를 분석할 수 있었다.

표-4 장애인 정책 예산의 성격별 분류 기준

번호	분 류	주요 사업
1	소득보장	개요: 장애인의 소득 보전에 관한 사업(현금급여 포함.) 사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아 무상보육료, 자녀학비지원, 난방비지원, 장애아입양 양육비, 장애아 특수보육(보조교사), 장애청소년, 장애아보육시설
2	의료재활	개요: 장애인의 의료비 등 경감 또는 면제 관련 사업 사례: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가족지원(장애아재활치료, 언어발달치료), 보장구구입, 장애인등록진단비,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 구강보건, 정신보건, 한센인, 정신질환, 보장구 수리, 보조공학센터, 의료재활시설(재활병원), 보조기구, 한센시설생계비지원, 정신건강증진센터, 난청진단, 장애등급심사제도, 응급안전서비스
3	자립생활	개요: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사업(여성장애인 사업도 포함.) 사례: 자립생활센터지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자립정착금지원,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장애여성사회활동참여, 장애여성출산지원금, 체험홈, 자립홈, 탈시설 지원, 활동지원, 가정폭력피해 장애여성 보호, 상담
4	장애인 시설	4-1 거주 시설 개요: 장애인이 외부와 고립된 채 생활하는 시설 관련 사업 사례: 장기거주시설, 개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각 시설의 운영비 및 기능보강, 종사자 수당, 입소자생활보장, 입소자실비지원, 개인운영거주시설
		4-2 지역 사회 시설 개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관련 사업 사례: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시설, 그룹홈, 장애인체육관, 각 시설의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수화통역센터, 재가장애인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재활지원센터, 지적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표-4 장애인 정책 예산의 성격별 분류 기준

번호	분 류	주요 사업
	4-3 직업 재활 시설	개요: 장애인의 직업 개발을 위한 시설 관련 사업 사례: 장애인자립작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재활훈련, 장애인생산 품 판매 등 각 시설의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근로작업장,
5	고용, 취업	개요: 직업재활기금 사업을 제외한 장애인 고용 및 취업관련 사업 사례: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장애인복지 일자리, 시각안마사일자 리, 요양보호사일자리, 장애인사회적일자리, 장애인기업지 원, 기능경기 대회, 취업박람회
6	이동, 편의	개요: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 관련 사업 사례: 장애인콜택시(특별운송),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승강기 리 프트 설치, 편의지원센터, 장애인 운전연습, 장애인무료셔틀 버스, 장애인주차, 주거환경개선,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저 상버스
7	문화, 체육, 정보	개요: 장애인 문화, 체육, 레저, 스포츠 활동과 정보접근 관련 사업 사례: 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의날 행사, 장애인문화예술제, 정보 화지원, 장애인문화향유, 체육회지원, 생활체육, 장애인체 전, 웹접근성, 점자도서관, 무료신문, 손말이음센터
8	기타 장애인 복지행정, 단체 지원	개요: 장애인 복지행정과 단체 지원 등 그 외 사업 사례: 단체지원금, 장애인복지행정, 인식개선, 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기금적립금, 성년후견인, 평생학습, 장애아부모심리 상담, 장애아부모휴식지원, 인권증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표-5는 2019년, 2020년 중앙정부 장애인 정책 예산 성격 분야별에 대해 증감률 추이를 정리한 표이다.

표-5 2019년, 2020년 중앙정부 소관부처별 장애인예산 증감률 분석

(단위: 천 원)

분야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	예산비교	증감률
자립생활	1,018,957,000	1,322,218,200	△ 303,261,200	△ 29.8%
소득보장	967,722,425	1,043,665,181	△ 75,942,756	△ 7.8%
고용·취업	504,665,314	733,213,577	△ 228,548,263	△ 45.3%
장애인시설	563,378,644	680,211,000	△ 116,832,356	△ 20.7%
의료·재활	589,998,807	560,273,013	▼ 29,725,794	▼ 5.0%

기타 장애인 복지행정, 단체 지원	474,474,932	525,755,238	△	51,280,306	△	10.8%
문화·체육·정보	86,762,150	127,434,517	△	40,672,367	△	46.9%
이동·편의	64,284,495	80,481,390	△	16,196,895	△	25.2%
합 계	4,270,243,767	5,073,252,116	△	803,008,349	△	18.8%

자립생활 분야가 1조 3,222억 원으로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소득보장 1조 436억 원, 고용취업 7,332억원, 장애인시설 6,802억원, 의료 재  
활 5,602억원, 복지행정단체지원 5,257억 원, 문화체육정보 1,274억 원, 이동편의  
분야 804억 원 순으로 예산규모를 보이고 있다.

예산 증감률을 살펴보면 의료재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 예산이 작년 대  
비 예산 증가률을 보이고 있다. 그 중 가장 높은 증가률을 보인 분야는 문화체육정보  
분야 예산이다. 문화 체육정보 분야는 2019년 867억 원에서 올해 406억 원이 증가  
한 1,274억 원이다. 2018년부터 꾸준히 높은 증가률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추이는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과 장애인의 체육활성화, 여행 환경 조성 지원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고용취업 분야도 2018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률을 보이고 있는 분야이  
다. 2019년 5,046억 원에서 올해는 약 45.3% 증가한 7,332억 원이 편성되었다. 문  
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예산의 증가의 영향이 크다. 대표적  
인 예산내역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

자립생활 분야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다. 2019년 자립생활 분야 예산은 1조 189억 원이었고, 올해는 3,032억 원  
이 증가한 1조 3,222억 원이다. 약 29.8%가 증가한 셈이다. 이 같은 추이의 원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8개  
성격분야 중 가장 많은 3천억원 이상의 예산 증액을 보이고 있지만, 장애계에서는  
요구한 예산이 1조 9,983억원이었던 것을 감안 하면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 장애  
계가 기대했던 것 만큼의 예산은 아니었다.

이동편의 분야는 작년 대비 예산 증가율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642억 원에서 2020년에는 약 25.2%가 증가한 804억 원이 편성되었다. 교통약자편의증진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으로 보고 있고, 중앙정부 각 소관부처에서 주기별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도 증가의 한 몫을 하고 있다.

기타 장애인복지 행정, 단체지원 분야는 2019년 4,744억 원이 편성된 것이 올해는 10.8% 증가한 5,257억 원이 편성되었다.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과 철도운영 PSO 보상 (교통약자를 위한 철도 공공운임 감면액 및 벽지 노선 경영손실액 보상) 예산, 장애학생 지원 및 특수교육 예산이 2018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가장 낮은 증가률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소득보장 분야이다. 2019년 9,677억 원에서 올해는 1조 436억 원으로 약 7.8%가 증가하였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예산이라 볼 수 있다. 이 분야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계에서 높은 예산 증액을 기대하였으나 단순 자연증가분으로 1조원대 돌파라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반면 의료재활 분야 예산은 감소하였다. 2019년 5,899억 원이 편성되었지만, 올해는 5,602억 원으로 297억 원이 감소하였다.

## 결론

2020년 중앙정부 소관부처별로 예산서를 전수 모니터링하여 장애인 예산을 발췌 후 분석한 결과 2020년 장애인 예산은 약 5조 732억 원으로 중앙정부 예산 총 512조 3,000억 원 대비 약 0.99% 수준이다. 작년 대비 8,03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중앙정부 예산 대비 장애인 예산 비율도 0.8% 증가하였다. 장애인 예산 규모는 작년 4조 2,702억 원 대비 약 18.8%가 증가했다. 예산 편성 비율이 높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예산 증가가 있었다. 예산 규모를 떠나 해양수산부, 산림청의 예산 증가 폭이 눈에 띈다. 성격 분류별로 접근하면 자립생활, 소득보장, 의료재활, 고용취업, 문화체육정보, 이동편의 장애인시

설, 기타장애인복지 행정, 단체지원 분야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증가한 반면, 의료재활 분야 예산이 소 폭으로 감소하였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이 916억원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지난해 보다 3천억원 가량 늘어난 1조 3,056억 원, 장애인일자리지원 1천415억(17.2%), 장애인연금 7천861억원(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예산이 깎인 항목들도 눈길을 끈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운영비 감소로 인해 장애정도심사 제도운영 항목이 18억원 줄었고, 매년 지급해오던 장애인의료비 미지급금 문제 해결로 인해 의료비도 71억원 삭감됐다.

예산 증가내역과 장애인의 욕구(소득, 의료, 고용, 건강, 주거, 이동권 보장), 탈시설 자립생활 기반의 완전한 사회참여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장애인 종합계획 사이의 연계성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계의 예산 확대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장애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되는 역사적인 변화 앞에서 장애계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예산을 현재보다 2조 원 규모의 증액'을 요구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맞춤형 서비스라는 취지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020년 중앙정부 장애인 정책예산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장애인 예산이 전체 예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것은 장애인 정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낮다는 것이고, 정책의 우선순위도 낮다는 의미이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예산 총액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으므로, 장애인 예산의 전반적인 확충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정책 과제이다.

또한 장애인 정책 예산 내역들을 분석해보면 예산 총액만 다를 뿐 대동소이하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통해 예산 규모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장애인식정도, 장애감수성을 고려한 새롭고, 개성 있는 장애인 정책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중앙정부가 예산의 확보 편성은 물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직접지불제도 도입과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강화와 같은 사람중심의 정책 예산 확대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장애주류화 관점에서 본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지예산 법안 포함, 장애주류화 총칙은 미반영

김동호 장애주류화정책포럼 대표

현재 국회에는 장애인 기본법적 성격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그것이다.<sup>(1)</sup> 법안은, 장애가 신체적·정신적 조건과 사회적 환경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개념의 변화, 다양해진 장애인의 요구 그리고 인권 기반의 장애인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미흡했던 기존 「장애인복지법」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법안은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 여러 가지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중 장애주류화의 관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을 살펴보자.

장애주류화(Disability Mainstreaming)는 장애 요소와 이에 대한 관점을 법률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정책에 고려하고 담아내는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별도로 또는 특별하게 다루기보다 일반적인 정책에 반영하여 국가정책의 주된 흐름과 향상 궤를 같이하게 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가령,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이용을 위한 지원 정책을 국가의 정보화 기본법령을 통해 보장하는 것,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책을 「양성평등정책 국가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 국가조달제도에서 모든 구매품목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매기준을 마련하는 것 등이 장애주류화에 부합하는 것이다.

장애인정책은 도입·개발되는 단계에서는 특별 범주로 설정되어야 효과적일 수 있었다. 그러나 다양화 되는 장애인의 요구를 보다 충실하게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국가 전반적인 주류의 정책과 법령에 장애와 장애인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1) 두 법안은 2017년 양승조위원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모태로 일부를 개정한 안으로, 장애주류화와 관련하여 내용 상 거의 차이가 없어 이 글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법안'으로 언급하겠다.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러한 장애주류화정책에는 장애영향평가, 장애인지예산제도, 장애인지통계 등의 제도적 장치가 있다. 장애영향평가는 법령과 국가사업에 장애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장애인지통계는 장애요소를 국가통계시스템에 포함하여 장애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분리된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이 중에서 '장애인지예산'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은 장애인지예산을 '장애인의 평등권 및 사회통합의 실현을 목적으로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편성·집행하는 예산'이라고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장애인지예산의 도입 및 실시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권리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재원의 우선적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임무', '지역장애인위원회',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지예산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법안은 '장애인지예산의 배분과 조정'에 있어 각 부처가 장애인지예산 관련 요구서를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하고 국가장애인위원회에서 심의하면,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가 반영하도록 한다. 그런데, 각 부처에서 장애인지예산의 분석과 편성·집행을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는 근거조항도 없다. 때문에 각 부처가 장애인지예산을 그 취지에 맞게 적절히 수립할지, 혹시 부처내의 일부 특화된 장애관련 예산을 장애인지예산으로 가림하여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장애인지예산은 부처단위가 아니라 모든 개별 단위사업 차원에서 분석·편성·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보면 현재의 법규정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

장애주류화의 관점에서 법안 중 또한 주목되는 것은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이다. 각각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는데, 그 역할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 해당부처 소관의 계획 수립과 조정을 맡는 것이다. 즉, 장애인의 삶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정부처가 관할하는 국가정책에 전반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이 각기 모든 부처에 지정되어 소속 부처의 정책에 장애라는 정책적 요소를 적용하도록 한 것인데, 장애주류화의 관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성주류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현재 각 부처 및 시·도 지자체에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좋은 예이다.

장애주류화가 특별한 조치보다 일반정책에 장애와 장애인을 융화시키는 것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법안의 그 밖의 몇 가지 조항은 바람직하다. '노령장애인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조기 노령화에 대한 정책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가건강증진사업에 장애인의 건강권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정책의 핵심법안에 장애와 장애인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반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위한 재난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리된 접근보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하도록 한 재난대피시설이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 장애주류화의 관점에서는 보다 적절하다. 법안이 장애인기본법으로서 장애주류화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가장 아쉬운 부분은 장애주류화에 대한 총칙이 없다는 것이다.

성주류화정책을 명시한 「양성평등기본법」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에 대한 조항을 두어 성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성주류화를 위한 규정처럼, 장애주류화를 위해서도 법안에 국가 법령과 정책 과정에 장애의 관점을 통합하는 총괄적인 기본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장애주류화에 대한 기본원칙이 없다는 것은 법안이 장애주류화의 지향을 담아내는 데 충분치 않았음을 의미한다.

장애인지예산과 함께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통계를 장애주류화정책의 실행제도로 구성하고 장애주류화 총칙을 바탕으로 별도의 장을 법안에 마련하면, 법안은 장애인기본법으로서 보다 충실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두 법안이 통과되기는 현재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은 21대 국회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 국회에서 새롭게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발의 된다면, 다시금 논의하여 장애주류화에 보다 충실한 장애인기본법으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서울형 장애인의 개인 예산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과제

고혜선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1988년 의학적 심사를 토대로 장애인을 1~6등급으로 구분하는 장애등급제가 도입되었다.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되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절대적 기준인 '등급'에 의해서만 서비스를 결정하고 제공하던 공급자 중심 방식에서 신체적·정신적 손상 정도, 근로 능력 정도, 서비스 욕구 및 필요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1~6등급의 장애정도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고, 종합조사표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하는 통합신청 방식으로 전환만으로는 실제적인 의미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엔 미흡하다는 평가다. 서비스 욕구를 보다 실효성 있게 연계하기 위한 전문가의 추가 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개별 서비스 접근을 위한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 장애인정책 복지과는 장애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경제, 2019, 9, 17).

개인예산제는 전달체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비스를 파악하여, 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선정하여 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장애인당사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는 제도이다. 복지기관으로 지급하던 복지예산을 장애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장애인당사자는 자기선택과 결정권을 가지고 서비스 이용을 주도하게 되며, 개인 돌봄의 범위를 벗어나 더 넓은 영역의 지원에도 사용할 수 있다.

개인예산제의 시범사업 추진을 두고, 복지서비스 총량의 변화 없는 도입, 최종중장애인의 배제, 서비스 질 저하, 중개수수료의 과다 책정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개인예산제는 개인 돌봄의 범위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영역의 지원을 고려하는 제도로 장애인당사자가 주어진 자원 안에서 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고 지역사



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데에 있다.

이에 미국, 영국의 개인예산제도와 국내 시범사업을 참고로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개인예산제의 프로세스 모델

미국의 미네소타주는 2005년부터 개인예산제도인 CDCS(Consumer Directed community Supports)를 운영하고 있다. 1995년 미네소타주의 장애인당사자들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욕구를 분출했다. 이를 반영해 장애인 거주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이 줄어들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을 위한 예산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CDCS의 토대가 되었다. CDCS는 재정도관리모델(Fiscal Conduit Model), 급여모델(Payroll Model), 기관선택모델(Agency with choice) 총 3가지 재정지원방식을 제시하고, 당사자가 모델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개별지원계획작성, 서비스제공기관 선택, 서비스제공자 고용, 정산(회계)까지 이용자가 모두 관리하는 재정도관리모델(Fiscal Conduit Model)을 통해 지원받는 이용자가 2%, 정산(회계)만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기관이 수행하는 급여모델(Payroll Model)이용자가 37%, 퍼실리테이터기관이 계획수립, 서비스 연계, 정산(회계)하는 기관선택모델(Agency with choice) 61%로 조사되었다. 모든 과정을 이용자가 결정하는 재정도관리모델(Fiscal Conduit Model)이 자립생활의 이상과 가까우나, 현실적인 이유로 퍼실리테이터기관의 역할이 큰 기관선택모델(Agency with choice)을 통해 지원받는 이용자가 61%를 차지하고 있다. 미네소타주는 향후 정산(회계)만 퍼실리테이터기관이 담당하는 급여모델(Payroll Model)만으로 개인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도입의 실효적, 정착적 차원에서 기관선택모델(Agency with choice)을 프로세스 모델로 제안하며, 향후 이용자의 역할이 커지는 다른 모델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1 개인예산제의 Roll 모델

구분	개별지원계획 작성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직접지원인 고용)	개인예산 정산(회계)
재정도관리모델 (Fiscal Conduit Model)	장애인당사자	장애인당사자	장애인당사자
급여모델 (Payroll Model)	장애인당사자	장애인당사자	퍼실리테이터 (facilitator) 기관
기관선택모델 (Agency with choice Model)	퍼실리테이터 (facilitator) 기관	퍼실리테이터 (facilitator) 기관	퍼실리테이터 (facilitator) 기관

### 2. 참가자 선정 기준

현행법상 15개 장애유형 전체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할 경우 규모가 너무 방대하다.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개인지원 계획수립, 지원욕구 측정도구 개발, 직접지원인 양성,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 발굴, 평가지표 개발 등. 시범사업 시행 전 준비과정에 필요한 시간과 예산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지원 대상과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참가자를 발달장애인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거주 발달장애인으로 한정하였다.

신체적 장애인은 개별지원계획 수립이 발달장애인에 비해 원활할 뿐만 아니라 종합인정조사표와 같은 구체적 도구들이 개발되어 있고, 부족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유형에 비해 자기결정, 자기선택, 자기권리주장, 자기보호에 어려움이 있어 학대나 무시, 성적 착취, 경제적 착취, 법적 권리침해 등에 노출되어 있다.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거주시설 이용자 중 발달장애인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탈시설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 탈시설하여 자립생활주택이나 체험홈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경증과 중증의 경계에 있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1) 여러 사람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할 때 효과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일의 과정을 설계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질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도록 도움을 준다는 의미로 적절한 번역이 어려워 외국어로 표기함

도 시범사업 대상자로 제안한다.

### 3. 서비스 구매 범위

개인예산제는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는 제도이기에 개인예산을 사용하여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용도)와 구매처(용처)의 인정 범위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개인예산제의 근본 취지를 고려할 때,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장애인당사자 개별의 욕구가 다르며,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자원연계 가능성의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영국, 미국, 호주처럼 용도 및 용처의 제한을 거의 두지 않되, 사정되지 않은 물품의 구매, 자산취득, 부채상환, 불법행위, 중복서비스 구매 등의 특정한 경우는 제한한다.

### 4. 서비스 단가

서비스 단가는 현실적인 서비스별 표준단가를 사전에 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표준단가를 적용하더라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조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비효율적이다. 영국과 호주는 활동지원에 대한 단가는 자율계약에 맡기며 기타 서비스 단가는 시장가격을 적용한다. 국내 활동지원에 대한 단가를 자율계약에 맡길 경우, 시장불안을 야기하므로,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경우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고, 기타 서비스는 자율계약 또는 시장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 5. 예산지급방식

개인별 예산의 지급방식은 바우처, 현금(전용계좌 입금), 기관보조금 세가지 지급 방식 중, 바우처나 기관보조금 지급 시, 용도·용처가 현금방식에 비해 제한될 가능성이 크므로,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현금(전용계좌 입금) 방식을 제안한다.

### 6. 개별지원계획 수립 (사람중심계획<sup>2)</sup> 적용)

당사자 혹은 대리인 등이 개인예산제를 신청하고, 선정되면 지원욕구를 개별지원계획을 사람중심계획(PCP: Person Centered Planning)에 기반하여 작성한다.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유형에 비해 자기결정, 자기권리주장, 자기보호 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중심계획에 기반한 개별지원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는데 원활한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하고 오랜 경험 또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

욕구사정을 바탕으로 한 개별지원계획을 통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서비스제공기관이 개별지원계획에 개입할 경우 사람중심계획보다는 서비스 연계에 비중을 뒤 객관성이 저하 될 소지가 농후하다. 작성주체는 전문성을 갖추고, 서비스제공과는 분리된 기관(혹은 개인)으로 자격을 제한한다.

개별지원계획의 효력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발생하며, 이때 장애인당사자에게 할당된 자원규모가 결정된다.

### 7. 지원욕구 측정도구

욕구는 탄력적이고 상대적이다. 또한 환경변화에 따라 달라지므로 욕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다. 욕구 사정을 위한 알맞은 도구 선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WHO(세계보건기구)의 ICF(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에서 제시한 9개의 활동과 참여 영역을 욕구 사정의 준거 틀거리로 삼을 수 있다. 국외에서 사용하는 인증받은 사정도구인 I-CAN과 SIS의 사용을 제안한다. I-CAN과 SIS를 사용하되, 국내 상황을 반영하여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관선택모델(Agency with choice)로 구성된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 프로세스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2) 장애인당사자와 가족,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장애인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희망, 삶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자원을 할당하는 과정

표2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 프로세스

구분	주체	주요내용
신청/접수	장애인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li> <li>- 구청장 또는 시장의 직권신청</li> </ul> </li> <li>신청방법 : 온라인(홈페이지 등), 우편, 전화, 팩스</li> <li>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지 : 서울시 25개 구 중 특정지역으로 한정</li> <li>- 장애유형 : 발달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시설 희망자, 자립주택 또는 체험홈 거주자</li> <li>· 경증과 중증의 경계에 있는 재가장애인</li> </ul> </li> </ul> </li> <li>신청접수기관 : 서울시</li> <li>결과통지 소요기간 : 1개월</li> </ul>
↓		
지원욕구 측정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측정도구 : I-CAN 또는 SIS</li> </ul>
↓		
개별지원계획 작성/제출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기관 (혹은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성방법 : 사람중심계획(PCP)에 기반하여 작성</li> <li>서비스 종류 : 서비스 종류의 제한을 두지 않음. 단, 불법행위, 자산취득, 부채상환, 저축, 사회활동과 연계되지 않은 의식주 등은 제외</li> <li>제출처 : 서울시</li> </ul>
↓		
개별지원계획 승인 (합의)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승인(합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예산 사용 목적과 목표</li> <li>- 서비스 종류, 사용횟수, 금액</li> <li>-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방법 등</li> </ul> </li> <li>합의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li> <li>-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li> </ul> </li> </ul>

- (3) 장애인의 지원욕구(support needs)를 분류하고 사정하는 도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지원이 제공되면 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척도로 WHO의 ICF를 기반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필요한 지원의 영역이 14가지로 구성됨
- (4) 장애인의 지원욕구(support needs)를 분류하고 사정하는 도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지원이 제공되면 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척도로 WHO의 ICF를 기반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필요한 지원의 영역이 14가지로 구성됨

↓		
개인예산 지급 (자원할당)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급방법 : 장애인당사자별 전용계좌 입금</li> </ul>
↓		
퍼실리테이터 기관과 계약체결	장애인당사자/ 퍼실리테이터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li> <li>- 직접지원인 고용 및 관리</li> <li>- 개인예산 정산대행</li> </ul> </li> </ul>
↓		
개인예산 집행	퍼실리테이터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 제공기관 연계</li> <li>개인예산 정산대행</li> <li>비용지급</li> </ul>
	서비스 제공기관 (직접지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종 서비스 제공</li> <li>직접지원인이 인적서비스 제공</li> <li>영수증 발급</li> </ul>
	장애인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종 서비스 이용</li> <li>직접지원인으로부터 인적서비스 이용</li> </ul>
↓		
개인예산 정산	퍼실리테이터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예산 집행기간 : 3개월, 6개월, 12개월 중 택1</li> <li>개인예산 정산기간 : 집행기간과 동일</li> <li>정산범위 : 개인예산 전액(100%)</li> </ul>
↓		
성과평가 및 품질관리	장애인당사자 /서울시 또는 시범사업 위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체별 성과평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당사자 : 개인별 성과평가</li> <li>- 서울시 또는 시범사업 위탁기관 : 시범사업의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개인별 성과평가</li> </ul> </li> </ul>

개인예산제도의 필요성과 가능성은 국외 흐름뿐만 아니라 몇 번에 걸친 서울시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예산제도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 연구가 필요하다. 시범사업을 통해 의미있는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개인예산제가 제도로 자리 잡을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흑과 백, 넘지 못할 선은 없다.



봉준호 감독 작품

# 기생충: 흑백판

송강호 이선균 조여정 최우식 박소담 이정은 장혜진 박명훈  
 제공/배급 CJ엔터테인먼트 제작 (주)바른손이앤에이 15세 이상 관람가

2월 26일 대개봉

## 봉준호 감독과 장애인 퀴터제 : 봉테일의 세계

류미레 푸른영상, 독립영화 감독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에 빛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각본상을 비롯해 국제장편영화상·감독상·작품상을 받음으로써 <기생충>은 한국영화의 역사 뿐 아니라 아카데미의 역사를 다시 썼다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역사를 다시 썼다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기생충>이 받은 상들 중에 '처음'이 두 개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시아계 작가로 각본상을 탄 것은 아카데미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92년 역사상 비영어권 작품으로는 최초의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비상국면에 돌입하기 전, 나라 전체가 기쁨에 휩싸이고 세계가 놀랐지요. 그 기쁨에 발맞추어 저도 제 나름의 '봉준호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수상을 기념해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저는 라디오방송에서 장애인이 등장하는 영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생물학적, 해부학적, 의학적 관점 뿐 아니라 심리학적 관점까지 포함해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영화를 소개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일곱 편 모두가 소개할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편씩 신작을 발굴하기 위해 늘 고민해야 하는 저로서는 봉준호 감독이 너무나 고맙지요. 봉준호 감독은 그동안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제 글을 지도 삼아 이번 기회에 봉준호 감독의 모든 영화를 정주행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봉준호 감독의 첫 장편은 <플란다스의 개>입니다. 이 영화는 잃어버린 개를 찾는 이야기가 중심 줄거리인데요 흥행에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때부터 봉준호 감독의 팬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지요. <플란다스의 개>에서는 단편 <지리멸렬>때부터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김뢰하 씨가 노숙인으로 등장합니다. 이름이 따로 없으니 그냥 '노숙인'이라고 부를게요. 영화 초반에 이



사람 때문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영화 마지막에도 주인공 현남과 추격전을 벌여 최고의 악당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갈 데 없고 먹을 것도 없던 차에 유기견이라고 생각한 강아지를 먹으려고 했다가 결국 체포되어 감옥에 가게 되는 데요 밥이라도 잘 줄 거라는 생각에 오히려 좋아하는 노숙인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봉준호 감독은 큰 주목과 인정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 영화에는 유행어가 생길 만큼 유명한 장애인 캐릭터 백광호가 등장합니다. 피해자 여성 중 한 사람을 좋아했던 백광호는 동네 청년으로 발달장애, 화상장애를 가진 설정으로 등장합니다. 백광호는 처음 용의자로 몰렸다가 결국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것으로 밝혀지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광호는 결정적인 증언의 순간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형사들은 중요한 증언을 확보할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고 마는데, 그들이 좀 더 일찍 백광호의 증언을 듣지 못한 이유가 바로 백광호의 발달장애 때문입니다. 만약 백광호가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었다면 사건은 훨씬 더 빨리 풀릴 수 있었을 텐데,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영화 속 인물들은 백광호의 말들을 믿을까 말까 망설입니다.

세 번째 영화 <괴물>에서는 주인공 박강두는 경계선급 발달장애인입니다. 등장하자마자 오징어 다리 떼어 먹는 모습에서 ‘혹시나’ 했는데, 딸 현서에게 휴대전화를 사 주려고 모았다는 동전 통을 내미는 순간 확실해지더라고요. 강두의 발달장애는 영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현서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그 말을 가족만 믿습니다. <살인의 추억> 백광호의 말이 신뢰를 받지 못했던 것과 같은 양상이지요. 강두가 총알의 숫자를 제대로 세지 못해 아버지 박희봉이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에서 강두의 장애특성은 더 확연하게 드러나지요.

네 번째 영화 <마더>는 발달장애인 도준이 주인공이죠. 배우 원빈 씨가 엄마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도준 역할을 너무나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할리우드든 우리나라든 배우들의 연기 인생에서 장애인 역할을 연기하는 것은 큰 분기점에 속하는데 원빈

씨가 정말 잘하더라고요. 사실 <괴물>의 박강두나 <마더>의 도준과 같은 지적장애 인들은 현실생활에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지능이 현저하게 낮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망상이나 정신분열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수룩한 거지요. 영화 속에서 도준의 그런 면모는 경찰서에서 심문받을 때 잘 드러 나는데요. 그래서 도준의 어수룩함, 장애는 영화 속에서 진범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을 계속 헛갈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영화 <설국열차>에서는 주인공 남궁민수가 약물중독자입니다. 남궁민수의 약물중독은 남궁민수의 말을 의심하게 하고, 설국열차의 본모습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꼬리칸의 정신적 지주인 길리엄의 팔이 하나 없지요. 길리엄의 장애는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길리엄의 고매한 인격, 희생정신을 상징합니다.

여섯 번째 영화 <옥자>에서는 지하도 탈출 장면에서 휠체어가 등장합니다. 미자가 옥자를 탈출시키려다가 추격전이 벌어지는데요. 옥자가 정신없이 도망치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막 피합니다. 옥자가 그렇게 지하도를 누비고 있을 때 바로 앞에 휠체어에 앉은 여성이 등장합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잠깐 외출한 것 같은데, 환자복을 입고 링거가 매달려있는 휠체어에 앉아있거든요. 그리고 보호자는 나이가 많은 할머니예요. 몸이 불편해서 피하지도 못하고 비명만 지르고 있는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옥자는 급회전을 합니다. 물론 미자가 도와주기도 했지요. ‘생사의 추격전에서도 약한 사람은 보호한다’는 효과를 위해서 휠체어가 등장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약한 사람은 보호해야 한다’는 선한 본성을 가진 관객들이 그 순간 더 조마조마했겠지요. 목발도 등장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미자와 옥자, 그리고 비밀동물보호단체(이하 ALF)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나왔는데, 바로 뒤에 경찰들이 막 쫓아오거든요. 그 때 ALF 사람이 다리에 붕대를 감은 채 목발을 짚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서 목발을 뺏어서 목발을 걸쇠 삼아 문을 잠궈버리는 거예요. 의도는 선하더라도 그들의 행동 모두를 지지할 수만은

없는 ALF 사람들의 위치가 확인되는 장면이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 그러니까 5초 이하로 휠체어와 목발이 등장하는데 그걸 꼼꼼하게 설명하다 보니 봉준호 감독은 현장에서 또 얼마나 세세하게 지도했을까 하는 생각에 새삼 감탄하게 되네요. 그래서 별명도 봉테일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째 영화 <기생충>에는 정신장애를 연상하게 하는 상황들이 등장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기생충>은 계급적으로 양극단에 있는 두 가족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잘 살고 싶었던 백수 가족의 엉뚱한 희망이 예기치 않은 사건에 휘말리면서 결국 봉준호 감독만의 희비극이 완성되는 영화지요. 이쯤이면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영화 개봉 중에는 절대 말하지 말아야했던 사람, 지하에 숨어 사는 근세 캐릭터를 어떻게들 보셨나요? 여러 번의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쫓기던 근세는 결국 박사장 집 지하에 숨어 삽니다. 모두가 외출하거나 모두가 잠든 후에만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근세는 박사장에게 뜨거운 존경을 표하지요. 박명훈 배우의 뛰어난 연기는 근세의 광기를 손에 잡힐 듯이 생생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사건 후의 기우도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아버지를 찾아다니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 모습들이 모두다 불안해보였어요. 기우가 부자가 되어서 그 집을 사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기우의 상상이었죠. 망상에 빠져 살아가는 기우의 모습이 참 슬펐습니다.

이번 글은 안내의 의미로만 한정하기에 간략하게 쓰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영화를 보신다면 어떤 식으로 해석하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화 잘 만드는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모든 영화에 크든 작든 장애인 캐릭터를 빠짐없이 넣었다는 게 새롭지 않나요? 물론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등장하는 장애인 캐릭터는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장르영화의 대가답게 장애인영화의 장르경향도 충실히 반영하는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발달장애인이거나 약물중독자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영화의 진실이 무엇인가, 저 사람의 말을 믿을만한가 라는 의문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로 그 사람의 캐릭터를 짐작하게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주류미디어에 등장하는 장애인 캐릭터의 경향성이 투명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도 시도라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잠깐 등장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물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캐릭터를 등장시키기 위해 장애특성을 연구할 것이고, 그 특성이 영화의 흐름과 어떻게 어울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보면 감독도 그리고 그렇게 재현된 장면을 보는 관객도 장애현실과 장애 인권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게 되니까요. 세상의 모든 감독들이 봉준호 감독만큼의 성의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2003년부터 장애인 쿼터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쿼터제란 영화나 드라마에 장애인을 꼭 한 번은 등장시키게 할당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파급력이 없어서 저 혼자 말하고 있는 상태지만요. 왜 2003년이나면 그 해에 영국의 방송창작산업 장애인네트워크(Broadcasting and Creative Industries Disability Network, BCIDN)가 작성한 ‘영국의 영상물에 대한 장애인 참여 가이드’를 봤거든요. 그 글은 장애인들을 동료로서, 리포터로서, 또는 관객의 일원으로 함께 일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아니라 “일일연속극에 장애를 가진 등장인물을 설정하거나 기존의 등장인물이 장애를 갖는 설정을 한다”, “드라마/일일연속극에 장애인 배우를 위해 장애를 포함시키도록 작가를 격려한다”와 같은 세심한 지침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애코드로 영화읽기’라는 작업은 숨은그림찾기랑 아주 비슷해요. 포스터나 홍보 문구에 장애가 등장한다는 정보가 있으면 편하게 볼 수 있지만 그런 영화는 많지 않아요.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기분으로 영화 한 편을 다 보았는데, 장애인 캐릭터가 단 1초도 등장하지 않는 영화가 수도룩합니다. 그래서 항상 실망시키지 않는 봉준호 감독이 늘 고맙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4관왕 석권에 즈음해서 봉준호 감독의 미덕을 추켜올리며 이참에 장애인 쿼터제를 함께 주장해보면 어떨까요? 독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세요.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21대 총선 투표소 모니터링'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을 시행하였다. 도내 230개 중 22개의 투표소가 대상이었다. 이어 추가로 2018년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모니터링 결과 편의시설이 미비하거나 잘못 설치된 36개소와 장소가 변경된 14개 투표소, 사전투표소 34개소와 사전투표소이면서 장소가 변경된 투표소 6개소 등 도내 90곳의 투표소를 대상으로 단독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장애인의 참정권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체크리스트를 설계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단원으로 참여하여 현장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크게 투표소 진입로, 출입문, 투표소 내 이동 및 화장실 접근성을 평가요소에 반영하였다. 이와 별도로 투표 당일에는 장애인 주차장 제공, 시각장애인 안내 인력 제공,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 제공, 기표 보조기구 제공, 접근성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 기표소 운용 등을 체크할 예정이다. 앞서 수행한 모니터링 결과는 4월 2일에 보도 자료를 통해 제공하였다.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올해도 변함없이 장애인정책모니터링 사업,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리더십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한다. 작년까지 3년 동안 진행했던 장애정책박람회는 올해부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수행한다. 대신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사업 규모를 확대해 수행한다. 2019년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 장애인공감문화축제를 진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5월로 예정되어 있던 축제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서울시 학술연구용역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의 확산에 따른 교통약자의 보행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2020년 디지털 지역혁신 활성화 사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격차 허물기',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도록 제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모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 모두가 편리한 웹·모바일 세상을 꿈꾸는 IT 사회적기업 웹와치

웹와치(주)는 모두가 편리한 웹·모바일 세상을 꿈꾸는 IT분야 최초의 사회적기업으로서, 웹사이트의 장애인 접근성을 심사 평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입니다.

웹와치(주)는 웹 접근성 진단 방법과 지표, 평가와 자동평가 보고서 등을 꾸준히 개발해왔으며, 웹 접근성 자동진단 도구인 Watch 1.0을 개발하여 프로그램 등록하고, 웹 접근성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인 WMS를 특허등록 하였으며, 모바일 접근성 원격 진단 솔루션 MAARES를 개발하여 특허출원 하는 등 접근성 분야 기술선도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 웹와치 주요 사업

###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공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보장한 웹사이트에 대해 인증하고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 MA진단·컨설팅 / 품질인증 Mobile App Accessibility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진단·컨설팅과 품질인증



- \* MA 품질인증 대상 : Google Android OS 기반 애플리케이션  
Apple IOS 기반 애플리케이션

### SA진단·컨설팅 / 품질인증 Software & Solution Accessibility

응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진단·컨설팅 및 품질인증



- \* SA 품질인증 대상 : Microsoft Windows OS 기반 소프트웨어  
사용자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 접근성 지원 소프트웨어  
웹 브라우저와 연동되는 RIA 소프트웨어 모듈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T. (02)2678-0078

E-mail. webwatch@webwatch.or.kr